

내년 성장 1%대 '경제 한파'...민생 어려움 가중

수출부진·내수위축·고물가 지속·고용 약화 등 겹악제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역대 최대인 65% 추진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둔화가 본격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더 큰 파고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들고, 지속적인 고물가 흐름으로 소비마저 얼어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침체와 금융 불안에 더해 올해 훈풍이 불었던 고용도 다시금 한파가 몰아닥치는 등 악재가 가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상승세가 꺾이겠지만 한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3.5%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위기에 봉착해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당면한 위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인구·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자 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우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2.5%보다 낮고,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대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

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그 만큼 내년도 경제 상황을 어렵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 할 것이라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5%로 올해 예상치인 5.1%보다는 낮겠지만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정부는 당면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경기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항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조영임 광산구의원 발의 '정책네트워크 조례안' 통과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집단1·2등)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고취를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의제 개발과 정책 연구 및 자문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네트워크의 기능과 구성, 정책위원의 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책네트워크는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자문,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정책 위원은 24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010년부터 정책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광산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방의회가 된다.

전남도 여순사건실무위 희생자 100명 심의·결정 요청

김영록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21일 전남도청에서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100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전남도는 2023년엔 신고 기간 연장과 함께 희생자 추추적 등을 통한 신고율 제고와 접수한 신고 내용 사실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100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 규명사건 등 공적증빙 첨부 사건 53건과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47건이다.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회생자,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여순사건 위원회로 심의·결정 요청한 367건 중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5명이다. 여기에 12월 말까지 110여명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남은 신고 기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발언하는 이상호 특위 위원장
이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을 찾아 현장조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특위... '부실대응' 서울경찰청 질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첫 합동조사가 이뤄진 21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코드제로(긴급상황 최고단계) 등 위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 등을 따져 물었다. 경찰청 측이 당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자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참담하다"며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21일 국정특위 서울경찰청 현장조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참사 당일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추궁했다. 다수 신고 처리 및 보고 경로는 물론 보고서 작성, 대통령실과의 소통 문제 등도 거론됐다.

먼저 야당 간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드제로 발생 보고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상황팀장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험 신고가 왔으며, 거기에 대해 상황실에서 충분히 출동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게 인지된 상황에서 다수 112 신고가 접수되면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코드제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파악 못하고 있었다"며 "112에선 코드제로 왜 서울청에선 서울청장 이태원 보고할 생각을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불편함을 신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암사 당할 것 같다는 유사한 신고가 11건 이상, 저희가 파악하기론 14건 이상인데 어떻게 상황팀장에게 보고가 안 됐나"라고 질의했다.

또 "112 치안종합상황실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다수자에 의한 반복 신고가 있었는데 3차 통화도 실시하지 않고, 공청도 실시하지 않고 분석 대응반 분석도 없고, 팀장 보고도 안 된 게 아니냐"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저희 상황실에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오후 10시에 코드제로 했을 때 심각하다, 담당자는 코드제로 쓰니 그 내용을 얘기했고 그 후 답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무전이 없었는데 열람해 보니 현장 처리되고 끝났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란 인식을 못했다"며 "그래서 팀장에게 보고도 안 되고, 저희도 인식 못해 서울청장에 보고가 안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당원투표 100%에 "대통령 지휘감독, 윤핵관 폭거"

"국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비스" 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언제 이렇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비스하게 찍소리도 못하는 정당이 됐느냐. 정말 한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질문에 "그 분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길래 세 차례 밥도 먹고 술도 먹었다. (대학) 선배 후배 사이 좋았다"며 "다만 경선은 치열하게 하는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공약, 도덕성, 대통령으로서 자격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대충 설령 설령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윤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했고, 그 앙금과 감정 때문에 제가 경기지사 나갔을 때 당선인 시절에 뒤에서 저를 떨어뜨리려고 온 경기도를 동원해서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경쟁 주자들의 견제 발언에 대해서도 날선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태적 일을 하는데 후보들이 분개하지 않고 '나는 바뀐 룰로도 1등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뉴스

"기술자산의 보고, 기술거래소 광주에 설립"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서 명승은 대표 주장

창업자와 재기 창업자들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기술거래소를 광주에 설립해 광주가 신산업, 신금융의 패러다임을 주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는 21일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재기 창업과 지역 창업 연계를 위한 기술거래소 정책적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시대는 기업과 함께 성장되는 기술과 지적자산, 기술거래 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술거래소 광주 설립을 제안했다.

명 대표는 "기술거래소를 광주에 설립하고 기술거래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광주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라는 인프라 안에서 샌드박스를 통해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거래소는 내부 기술개발의 한계를 외부 기술도입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거래를, 벤처기업협회는 인수와 합병의 거래를 목적으로 의기투합해 지난 2000년 설립됐으나 2009년 벤처 버블 붕괴와 정부출자기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9년 4개 기관과 통합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거래량 정체와 기술평가 수준을 둘러싼 논란, '세계 최초'라는 부담감, 민관 협력의 어려움 등으로 기술거래소 부활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상황이다.

기술자산화는 물론 기술유통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기술 공동 소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고 거래소의 다양성이 증대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명 대표는 "기술거래소는 창업자와 재기창업자들의 창업 아이템이 자산이 되는 새로운 창구"라며 "청년과 기술기업을 광주로 유인하고 광주에서 기술을 거래하도록 해 신산업, 신금융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때"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민단체, 민선8기 시정에 '회초리'

주민자치·노동 등 분야에서 '기대 이하' 평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8기 출범 6개월을 맞은 광주시를 향해 "참여와 자치라는 지방자치제의 근본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NGO센터에서 '민선8기 출범 6개월 평가·2024 총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집담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이 펼친 시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지적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민선8기 광주시를 평가하는 주민참여는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자치분권 2.0"이라며 "자치분권 2.0은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있으나 민선8기 광주시는 이 같은 가치 실현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처장은 "올해 125억원이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68억원으로 축소 편성된 뒤 의회에서 다시 50억원으로 삭감되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와 의회 간 예산 줄다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질의했다.

"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 대표로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 물으려는 시의원의 권한까지 문제삼았다"며 "시의원들을 거수기로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도 했다.

주민자치의 핵심수단인 '시민참여권'도 지난 민선 당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하계 아시안게임, 복합쇼핑몰 유치와 같은 미래 사업계획에서 시민 참여 기반은 사라지고 형식적 여론조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시의 행정에 제동을 거는 근본 이유를 무시해온 광주시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김도기 기자

김진표 의장 "23일 예산안 처리 본회의" 최후통첩

"미합의 시 정부안 또는 野수정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의 공전 속에 김 의장이 결단을 내린 최후통첩한 모양새다.

21일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과 회기를 넘기면서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법안제,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고 한다.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일도 있었다.

호매민평

이태원

제왕의나라

양보하면 지는거야 Good-★★★★★

국민정당 40% 지지율

인법

주인님저는요?

사법 행정

태한

국힘&윤식당